

폐업(부도)된 업체의 경력신고 안내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 해당 소속회사의 폐업(부도) 등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경력을 신고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폐업(부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쇄등기부등본·폐업사실증명서 등)와 동서류상의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인감으로 확인 받은 경력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사본가능),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에 건설기술경력을 인정하였으나, 대행업체 등이 인감증명서 등 일부 서류가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한 것을 악용하여 인감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등을 위·변조하여 허위 경력을 신고함에 따라 선의의 건설기술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폐업(부도)된 업체의 기술경력 신고서 인감증명서 등을 원본으로 첨부하여 신고토록 개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업(부도)업체의 기술경력인정

- ①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폐업)또는 폐업사실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 ②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 1인의 인감도장으로 확인(날인)]
 - ③ 경력확인서에 확인(날인)한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 인감증명서
 - ④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대리인 및 우편접수시 본인 인감도장 날인)
 - ⑤ 본인 인감증명서(대리인 및 우편접수시)
 - ⑥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및 우편접수시)
 - ⑦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접수시)
- ▷ 폐업(부도)업체의 근무기간만 인정
- 본인 : ①,④,⑥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
 - 대리인·우편 : ①,④,⑤,⑥,⑦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상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 추진 안내

기술사사무소 임직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인 공제상품〉- 기술사관련사항만 기재

1. 퇴직공제상품(단체가입)

- 가입대상 : 기술사회 임직원, 기술사사무소 소속 임직원 등
- 시행시기 : 2004년 6월 중

2. 적립형 공제상품(개인가입)

- 가입대상 : 기술사회 회원, 기술사사무소 임직원 등
 - 시행시기 : 2004년 하반기 또는 2005년 상반기 중
- ▷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 「퇴직공제상품」에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는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문의 바람.
- ▷ 과학기술인공제회(www.sema.or.kr)
- 전화 : 02-527-8880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7층

건교부,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 도입 (출처 : 일간건설, 2004-05-07)

□ 건설교통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 중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건축물 안전성능에 대한 평가지침과 세부항목, 평가방법 등을 최종 확정된 뒤 관련 지침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단기적으로 보수·보강, 리모델링 등에 활용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매매, 은행융자 감정평가시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는 콘크리트와 골조의 현상태 등 구조

물의 노후화 진행정도 및 안전상태를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일본 등에는 이미 도입돼 활용이 보편화되었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당장은 의무화하지 않고 건축주나 매수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성능평가는 건교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건축주나 매수자 관계없이 안전성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고강도 콘크리트 화재 취약 (출처 : KBS, 2004-04-04)

- 최근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유행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일반 콘크리트와는 다른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되는데 화재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곳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2배 정도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나 고강도 콘크리트는 열에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를 화로에 집어넣고 1200도의 불로 가열했습니다. 20분 뒤, 일반 콘크리트는 그대로지만 고강도는 폭발해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콘크리트에 열을 가하면 내부 수증기가 분해되는데 고

강도 콘크리트는 내부 밀도가 높아 수분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권영진(호서대 소방학과 교수): 폭발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 철근에 화염이 직접 가열됨으로 해서 구조물 전체에 심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상균(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일본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유리섬유 등을 이용해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발을 저감시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조차 미비한 실정입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저가수주를 한 이유는 시공실적 확보가 53%로 제일 많았고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30%), 공공공사 비중 확대(14%), 직원관리(2%), 발주기관과의 지속적 관계유지(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자가 예상되는 최저가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여타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한다는 응답이 47%, 신공법 적용이나 관리 효율화가 25%, 주택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보전이 14%라고 답했으며 저가하도급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또 최저가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현장소장들의 87%가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설계변경 횟수는 3회 미만인 61%였고 그 이유도 설계도면 부실(40%)이나 발주자의 요구(40%)가 결정적인 것이었지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보전(3%)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저가낙찰 방지대책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49%가 현행 저가심의제도의 개선

을 요구했으며 28%는 FQ변별력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수 축소, 13%는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내실화를 들었다.

또 저가심의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FQ기준을 강화해 저가낙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FQ통과업체가 너무 많거나 다소 많은 편이다가 48%, 적정하다가 45%로 나타났으며 FQ 통과업체수가 줄어들어도 저가낙찰 방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도 58%를 차지했다.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저가낙찰 방지장치로 실효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29%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답했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46%에 달했으며 이행보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증시장 개방(51%), 담보요구 폐지(25%), 역무보증 폐지(20%)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규제 강화는 저가낙찰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6%를 차지했으며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감리원을 50%까지 추가투입해 품질을 확보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에 달해 실효성없이 업역갈등을 야기하고 최저가공사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 아산신도시 기반조성 본격화

아산신도시 1단계 기반조성공사가 내년 하반기 착공된다. 4월 22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 개발계획이 승인돼 보상작업을 준비중인 아산신도시 기반조성공사를 실시계획승인이 되는 대로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공은 이를 위해 연내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인·허가절

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중 기반조성공사를 발주기로 했다. 이 공사는 아산시 배방면 장재 1·2·3·4리와 천안시 불당동 일부 등 107만평 규모로 시행되며 기반조성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개발비로만 4천500억원 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기반조성공사

가 마무리되면 이 곳에는 7천780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2만4천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중 단독주택이 847가구 건설되고 공동주택은 5천446가구, 1천487가구는 주상복합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아파트 건설계획은 내년 2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6년초 아파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특히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면 개별택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으로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

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주공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주변의 상업용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민간업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주공차원에서 택지분양효과를 높일 수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의 18.5%인 19만7천평은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고 6.7%인 7만7천평은 상업용지, 71.5%인 76만6천평은 공공시설용지, 3.3%인 3만5천평은 업무시설용지로 개발된다.

부산시, 미음·송정 신도시개발

서부산권 개발의 핵심 사업지역인 강서구 미음지구와 송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4월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권을 놓고 도개공과 토공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여온 강서구 미음동 일원의 미음지구(108만평)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도개공을 선정, 주거 및 지원시설 여가·휴양 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확정했다. 미음지구는 사업비 1조725억원을 투입,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신도시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이지만 시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주거와 호텔 등 숙박

시설 수요에 따라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시는 강서구 송정동 일원의 송정지구 35만평을 토공이 맡아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토록 조정했다. 송정지구는 내년말까지 상세계획 수립과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한 뒤 2천9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1년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동·서부산권 개발사업 가운데 송정지구를 비롯한 서부산유통단지 명지지구와 동부산관광단지 삼성지구는 토공이, 화전지구 미음신도시는 도개공이 각각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중기청, 재래시장 202곳 환경개선

4월부터 전국 202개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의 매출 급감과 대형할인점 진출 확대에 대응해 올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천150억원을 책정하고 국고지원대상으로 부산 동래시장 등 202곳을 선정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번 중기청의 지원사업은 시장당 30억원 이내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보조하는 것이며 지자체가 30%, 자비로 2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4월부터 각 지자체의 재래시장 환경개선공사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3월 5일 중부권

을 강타한 기습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전 태평시장 등 5개 재래시장에 대해 24억원의 국고가 우선 지원된다. 환경개선 내용으로는 91개 시장이 41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건물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아케이드(차양막) 설치(59개 시장 331억원) △주차장및 주차시설 확충(46개 시장 366억원) △만남의 광장 및 이벤트공간 설치(6개 시장 4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전문상가형, 전통상가 복원형 등 시장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 등을 개발키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지자체에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난관리 소방방재청 골격 드러내 (출처 : 연합뉴스, 2004-05-11)

□ 태풍 루사나 매미, 대구지하철 사고 등과 같은 대형 재해,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 최초의 재난관리 총괄기구인 소방방재청이 6월 1일 전체 정원 435명에 1관 3국 19과로 공식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

설되는 소방방재청의 직제를 이처럼勾勒했다. □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차장은 별정직 1급 또는 소방직 공무원으로 보임토록 돼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는 청장이 정무직이 되면 차장은 소방직으로 임용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뒤 청

장이나 차장 중 한명이 무조건 소방직 공무원이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급 청장과 1급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실,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 등 1관 3국을 두도록 했다.

- 하부조직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재난사태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전의 민방위와 소방, 방재 등 재난유형별 조직에서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과정별 조직으로 전환했다. 기획관리관실 아래 혁신인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행정직이, 예방기획국 아래 기획총괄과, 민방위계획과, 소방정책과, 특수재난관리과, 민간안전협력과는 소방직, 기술직, 행정직이 나뉘 말도록 했다. 대응관리국 아래 대응기획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시설장비과는 소방직만, 복구지원국의 수습대책과, 복구과, 기술지원과, 심사평가과는 기술직만 담당토록 했다.
- 안전예방 활동과 재난관련 시스템 평가, 복구지원 기능 등을 강

화하기 위해 신설된 민간안전협력과와 시설장비과, 심사평가과가 눈에 띈다. 그동안 행자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돼온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대, 방재연구소, 민방위교육관도 모두 청으로 이관됐다.

- 재난담당 중앙긴급구조본부상황실과 재해담당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로 통합되지만, 시설이동 등에 큰 비용이 들어 일단 정부중앙청사내 그대로 두고 운영된다. 청사는 정부중앙청사 인근 한국생산성본부가 유력한데 일단 청 출범 후 지원부서 일부만 이동해 새 살림을 시작할 예정이다.
- 반면 행자부에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가 없어지고 신설 안전정책관을 뒤 일반 재해, 재난과 달리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나 테러,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 등을 총괄 지원하고 소방방재청의 법령발의 등 업무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정부, 건설기술 특허권 보호 강화 (출처 : 일간건설, 2004-05-04)

- 현행 친고죄로 규정된 건설기술 등 특허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리방식이 피해자 고소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5월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0개 부처 차관급 인사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적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적재산권 보호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특허권이 있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기술은 물론 주택브랜드에 이르기까지 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업체의 고소가 없으면 감사의 공소(법원재판 청구)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피해업체 고소없이도 공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운용되기 때문에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재판은 할 수 있지만 피해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운용된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공소요건은 완화하되 처벌 여부에 대해선 피해업체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재판 착수 후 사전협의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키 위한 것이란 게 국무조정실측 설명이다.
- 조정실은 침해사범 처리방식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각 부처별 실무 작업에 착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근절키 위한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전국 23개 검찰청에 정부지역합동단속

반을 각각 설치하고 내달 25일까지 집중적 단속에 나서는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시적 단속 및 처벌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 한편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로 특허권(기술, 발명), 실용신안권(고안), 의장권(디자인), 상표권(브랜드)의 4대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학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 주상복합 리모델링 쉬워진다 (출처 : 한국경제, 2004-05-06)
-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주상복합은 물론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이 제정(72년)되기 전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율을 현행 1백%에서 80%로 낮추고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주택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된 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조합설립)때 주민동의 요건이 종전 1백%에서 80%로 낮아졌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이 기준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주택성능표시제 내년 도입 (출처 : 일간건설, 2004-04-27)

-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우선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굽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건교부는 앞으로 경량충격음 뿐만 아

니라 화장실소음, 가구간 경계소음, 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정할 계획이다. 이른바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종류 및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 또 △외부조경 △아파트 배관재(동파이프) 등 자재 △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주택 등) △에너지 효율 등과 관련한 등급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주택의 세부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파트 품질 경쟁을 촉발하게 됨은 물론 차별화현상도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교부, 설계변경 최소화방안 추진 (출처 : 일간건설, 2004-04-19)

- 설계부실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CM) 발주 지침서가 제정되고 공정과 원가를 통합관리하는 EVMS(수익가치관리시스템)의 현장적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 건교부는 설계의 내실화를 유도해 설계변경 요인을 예방하고 부실설계를 막기 위해 설계감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설계감리제도는 도입되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설계변경이 빈발할 뿐만 아니라 부실설계를 사전에 거르는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재, 공법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건교부는 용역을 통해 설계감리제도의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설계감리

업무수행 지침서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의 CM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발주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담은 CM발주안내서를 하반기 중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안내서에는 발주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발주이전, 발주, 업무, 업무후 등 단계별로 나눠 발주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 건교부는 특히 모든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항목 외에 공사 및 발주기관의 특성에 맞게 추가 변경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 기술력을 제고하고 공정·공기관리 체계화 및 전산기반 공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VMS의 현장적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CM시범사업에 EVMS를 일부 적용해 애로사항 및 적용상 문제점 등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관련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건교부, 턴키·대안입찰제 개선추진 (출처 : 일간건설, 2004-03-31)

- 대안입찰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에서 공기를 가격요소로 인정하는 공기단축형 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턴키 및 대안입찰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4월 30일 밝혔다.
- 건교부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착수시기 불투명 등으로 설계여

건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발주기관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실시설계에 대한 대안입찰을 실시해 설계비의 이중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건교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을 개편해 실시설계에 대한 대안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설계 대안방식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해복구, 교량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단축형 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거나 단축한 공기를 금액으로 산정해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 건교부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국가예산편성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시행한 공기·공사비·품질 등 성과를 조사하고 외국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분류기준의 선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도입된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지수 등 적산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수량산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30층 이상 중간피난층 의무화 (출처 : 일간건설, 2004-03-30)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에 새로 들어서는 초고층 및 대형 다중이용건축물에는 새로운 피난방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내 1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는 옥상 피난처와 피난계단의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3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는 중간 피난층이 별도로 설치되며 그밖에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배연설비를 비롯한 각종 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3월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방재본부는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고층건물 또는 대형 다중이용건축물의 피난방재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하고 현재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를 통해 기준 정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또 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새 방재기준에 대한 자문·의견조율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새 방재기준안을 확정, 상반기 중 시 건축계획심의기준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등에도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 시가 검토하고 있는 새 피난방재기준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탈출 통로와 대피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배연·제연설비와 화재탐지시스템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먼저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에는 옥상에 일정한 화재피난처를 두도록 하고 3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는 유사시 빠져나갈 수 있는 피난계단을 2개소 이상 확보하되 피난계단의 폭과 부속실 적정면적도 새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고층건물 중간

층에는 별도의 피난층을 설치하고 평소 휴식공간이나 아파트 발코니를 이용해 피난구조를 체계화하는 등 세대간 상호 피난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시는 또 배연설비 시설기준을 기존의 자연환기 방식에서 강제배기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대수에 관한 시설기준도 수치기준에서 면적·용도·상주인구 등을 합산해 성능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15층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도록 하고 침실에는 단독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천정에도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 지하주차장의 화재 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배기팬의 내열성능 및 램프 셔터에 대해서도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이밖에 다양한 건축 용도에 따라 소방 취약시설 대상을 발굴해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기회사 대표 / 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